

자료제공 : 2016. 8. 3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담당부서 :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

청년정책담당관	구종원	2133-6575
청년활동지원팀장	양호경	2133-6589
담당자	최정민	2133-6588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2매

서울시, 청년활동 지원 시작!

SMG started its Financial Aid for the Youth!

-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, 정성적·정량적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
-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지원
- 서울시, 역량강화·진로모색 등 다양한 취·창업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

서울시는 7월4일(월)부터 7월15일(금)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, 정량평가 등을 거쳐 8월3일 최종대상자를 3,000명을 선정했다. 또한 8월3일(수)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,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. 이와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시작한다.

서울시는 정성평가로 지난 7월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, 활동목표,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미비자(사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* 등)를 제외했다.

* 자산축적 목적 등 취창업·역량강화·진로모색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

- 최종적으로는 정량평가를 통해 ①가구소득(건강보험료) 50%, ②미취업기간(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) 50%, ③부양가족수(주민등록 등본)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.
- 서울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여 협의에 응해왔으며, 8월2일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.
-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.
-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.
-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“이번 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추가 선발을 고민한 것이 사실이다. 하지만 정부의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. 향후 서울시는 이 사업을 보완, 확대해나가면서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